



12월 20일(수) 15:30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브리핑 : 12.20(수) 15:30, 정부서울청사	
담당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손선미, 사무관 이병화 (044-200-2325, 233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조민경, 사무관 남상희 (02-2100-6141, 6142)

양성평등,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핵심가치입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0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민간위원(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정부위원(여가부장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행안·문체·농림·복지·고용·중기부 차관, 산업부 실장, 기재·교육·과기부 국장)

○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 2017.12.1~2019.11.30)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회의에서는 앞서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된 결과인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 분야 등 영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의결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며, ①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②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③일과 생활의 균형, ④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기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육성·지원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했습니다.
 -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 현재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 ‘양성평등’ 21.0%, ‘여성이 불평등’ 62.6%, ‘남성이 불평등’ 16.4%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6년)
- 이에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실태조사(‘16.9~10월, ‘17. 3월 공표)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17.6~7월)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반영했습니다.
 -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국민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23.4%)’, ‘성별 임금 격차 해소(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16.4%)’ 요구를 정책과제로 반영했습니다.
 - 또한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실시,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 성폭력 근절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제2차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 각 부처는 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 향후 5년 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 등을 위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 이밖에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및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성평등 사회문화를 확산해 나갑니다.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 또한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군대와 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선발 과정을 개선합니다.
-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관리직,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공개합니다.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 무기계약 전환 간주로 인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 간주기간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맞춤형 가사·육아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합니다.
-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민건강증진 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하고,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분야별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평가 등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합니다.
- 평화·통일 활동을 위한 여성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합니다.

<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과제와 방향을 수립·평가하는 기초자료로서 **‘국가 성평등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합니다.

국가성평등지수

- (정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 (특징) 남녀의 격차(GAP)을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
- (지표체계) 3개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영역	①사회 참여 영역			②인권·복지 영역			③의식·문화 영역	
분야	경제활동	의사 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 (산정방법) 성비가 완전평등상태는 100점, 완전불평등상태는 0점

- **‘16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2.7점으로** 전년(‘15년)보다 2.5점 상승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지수 측정 이래 매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었고, 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위원회 위촉직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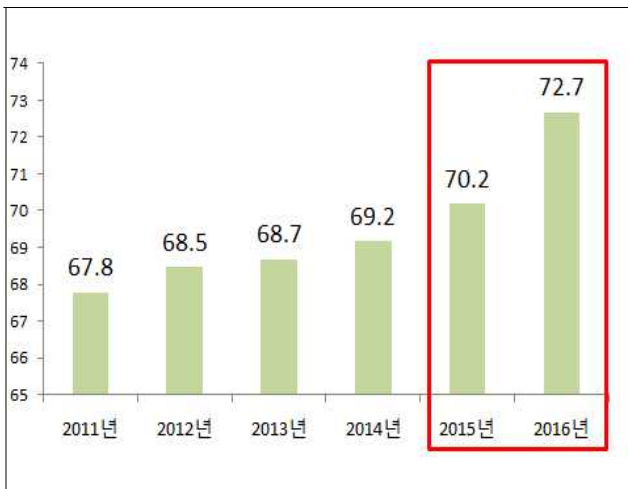
○ 세부 지표별로는 총 25개 지표 중 19개 지표값이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6개 지표값이 하락했습니다.

- 작년은 특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제도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육아휴직 성비'가 전년에 비해 33.6점이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 이 외에도 정부위원회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승) 육아휴직 성비(33.6점 ↑), 정부위원회 성비(5.1점 ↑),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26점 ↑) 등 (하락) 성별 정보화 격차(3.0점 ↓), 장애인고용률(2.8점 ↓), 관리자(민간) 비율(1.4점 ↓) 등

<연도별 추이>



<분야별 수준 변화>



□ 여성가족부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의사결정 분야, 안전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수립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1.2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9.26),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11.28) 등

○ 이를 고려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붙임) 1.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2.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4. 2차 기본계획 관련 인포그래픽
 5.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6.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붙임 1**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구 분	구 성
위 원 장 (1)	국무총리
부위원장 (1)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13)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민간위원(10)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붙임 2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가나다 순)

연번	성명	사진	현 직	주요 경력
1	강명득		변호사 겸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위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국장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국장
2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현)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현)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소장 및 이사
3	권해효		배우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홍보대사 (전) 희망서울 홍보대사 (전) 극단 한양레퍼토리 단원
4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 (전) 연세대 성폭력상담실장 (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5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현) 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 (현) 한국여성재단 이사 (전)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사무총장
6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전)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간사
7	변상욱		CBS 대기자	(전) CBS 콘텐츠본부장 (전) CBS 부산방송본부장 (전) CBS 보도국 부국장
8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9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서울여대 평생교육원장 (전) 감사교육원 자문위원 (전) 한국사회복지학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
10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붙임 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1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정책 과제	대과제 (6개)	종과제 (22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 핵심과제

대과제	주요 핵심과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교육 강화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17년) 500인 이상, (18년) 300인 이상, (19년) 전체 확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 확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장치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등 기념사업 추진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 목표
-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 일과 생활의 균형
 -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6대 과제 분야별 핵심정책

<p>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 위한 교원 교육 강화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p>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p>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업 양성평등 경영 지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
<p>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육아나눔터 및 지역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p>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p>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붙임 5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부처명	성평등 실행목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 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기획재정부	-국가적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내실화	-공공기관의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관리자 확대에 대한 책임성 강화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 기반 강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교육부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및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학교 및 교육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R&D 사업 참여의 성별 격차 완화	-과학기술 분야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대표성 제고			
외교부			-여성 인력의 국제 기구 진출 지원 확대		-재외 공관의 성폭력 예방 및 교육 강화	-양성평등 증진 관련 국제 협력 확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ODA 사업 추진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	-통일 기반 조성에 여성 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			
법무부					-취약 여성 사법 제도 접근권 강화 및 활용 확대 -성폭력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국방부	-성 차별 근절과 인권 존중의 정훈 문화 정착으로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 증진	-군 인적자원 개발의 성별 형평성(군장학생 및 전직 지원 포함)	-군 간부 여성비율 확대와 직무 분리 완화	-군 복무 여건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정착 -군부대 육아 지원 시설 확대	-군 조직의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군인의 모·부성권 보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 포함) 가족 친화 경영 정착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문화·예술, 전 문체육 분야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여성 대표성 증진		-문화예술·전문 체육·관광산업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여성 농업인 참여 확대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여성 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부품 소재, 에너지 자원, 바이오 의료 등 R&D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증대	-산업·통상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보건복지부		-돌봄 근로자 처우 개선	-복지 및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모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아동 양육비용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여성 건강 취약 계층의 공공의료 접근권 개선	
환경부		-환경 분야 여성 인적 자원 개발 확대 -환경분야 일자리 성별격차 완화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			-국제 환경 협력에서 여성 참여 강화

부처명	성평등 실행목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 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진입과 경력 유지 과정에서 성차별 해소 -성별 직업 분리 근절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유리천장 근절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차별 의식 해소 기반 마련 -생활 속(교육환경, 가족문화, 온라인 상 등)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 -고용에서의 성차별(성별임금격차, 성별직업분리 등) 개선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분야, 민간 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여성 관리자 양성 등 여성 인력 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및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건강증진 정책에 서의 성인지 관점 제고 -여성장애인 및 청소년의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및 성별 분리 완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 교통서비스에서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취업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금융, 벤처 및 엔젤 투자 등 금융 접근성에서 성별 형평성 강화 -여성기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창업 지원 사업 등의 성별 격차 완화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 보호 활동 지원 내실화 -강력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실효성 제고 및 다양한 성폭력(사이버 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여성의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전문성 함양 -여성 농업인 창업 사업장 경영개선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농업인의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강화 	

(단위: 완전 성평등=100.0)

부 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성평등지수	67.8	68.5	68.7	69.2	70.2	72.7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59.8	60.4	61.1	62.7	63.3	64.2
경제활동 분야	68.9	69.9	70.4	71.1	71.5	72.4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0.9	71.1	71.6	72.5	73.7	74.0
성별 임금격차 성비	63.3	64.4	64.0	63.1	62.8	64.1
상용근로자 성비	72.5	74.2	75.6	77.6	77.9	79.2
의사결정 분야	18.9	20.0	21.3	23.6	24.9	26.5
국회의원 성비	17.1	18.0	18.0	18.9	18.9	19.8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10.4	11.0	11.9	12.9	14.0	15.7
관리자 성비	15.8	17.4	17.8	17.2	16.0	14.6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	32.3	33.9	37.5	45.5	50.9	56.0
교육·직업훈련 분야	91.5	91.3	91.5	93.3	93.4	93.7
평균교육연수 성비	88.1	88.4	88.6	88.8	89.1	89.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86.5	85.4	85.8	91.2	91.1	91.9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75.9	76.5	75.4	73.3	74.6	77.7
복지 분야	68.2	69.8	69.6	69.0	71.6	72.0
비 빈곤 가구주 성비	84.8	89.1	89.7	90.1	88.3	89.8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69.2	72.8	74.6	76.9	79.4	82.0
장애인 고용률 성비	50.7	47.5	44.6	40.1	47.0	44.2
보건 분야	95.3	94.3	95.8	95.8	96.9	97.0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별 격차	96.9	97.0	96.6	97.0	97.7	98.4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6.1	96.1	95.4	95.9	96.3	97.0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92.8	89.8	95.5	94.4	96.7	95.5
안전 분야	64.2	65.4	60.8	55.1	55.4	64.1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69.6	70.4	67.4	63.2	65.2	66.7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58.8	60.5	54.1	46.9	45.7	61.6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71.9	72.9	74.4	77.2	78.5	82.7
가족 분야	59.8	60.9	62.9	66.7	70.0	78.0
가사노동시간 성비	24.0	24.6	25.2	25.8	26.4	27.0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5	93.1	94.1	95.1	94.4	93.8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96.8	97.1	98.1	99.4	100.0	98.7
육아휴직 성비	24.7	28.7	34.1	46.6	59.1	92.7
문화·정보 분야	84.1	84.9	85.8	87.7	87.1	87.3
여가시간 성비	76.1	76.7	77.3	77.9	78.6	79.2
여가만족도 성비	87.0	89.2	90.8	92.2	91.9	94.7
성별정보화격차	89.2	88.7	89.4	93.1	90.9	88.0